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제4회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같은 날 금남로 일대에서 가족과 다음세대를 다시 세우다. 퀴어행사 반대 집회도 함께 열렸다.

3년 만에 광주 도심 퀴어축제...우려했던 충돌 없이 끝나

광주 도심에서 3년 만에 열린 퀴어문화 축제가 보수 기독교계 성향 단체가 주관한 맞불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충장로 일대에서 제4회 광주퀴어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무등: 무지갯빛 절대평등'을 주제로, 광주의 대표 상징물 '무등산'과 '등급 또는 차이가 없다'는 뜻을 가진 '무등'에서 착안됐다.

주최 측 추산 축제 참가자 2000여명은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페이스 페인팅을 하거나 깃발을 흔들며 축제를 즐겼다. '성 평등을 향한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퀴어 해방' 등 직접 만든 피켓을 든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부스 행사에서는 전국의 성소수자 단

주최측 추산 2000명 참석...보수 성향단체 반대 집회 동시 열려

“차별금지법 제정” vs “국민 반대로 네 차례 폐기” 온도차 확연

체와 연대단체·정당 등 50여 단체가 참여했다.

석영 광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코자 했던 최초의 움직임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계절이 흐를 때마다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시달리는 성소수자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심장·인권의 도시, 5·18정신이 빛나는 광주에서 성 소수자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한다. 무등(無等)의 뜻대로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도시 광주에서 무지갯빛으로 널리

빛나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가족과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다. 퀴어 행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광주전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시민연합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등 7개 단체가 주관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열리는 곳과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소리쳤다.

주최 측은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네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민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법적 개념의 모호성 등 구조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재발의

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퀴어 행사가 버젓이 대낮에 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에 양측 참석자들의 집회·도심 행진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졌으나 다행히 이렇다 할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 역시 기동대 등을 투입해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며 안전한 집회 관리에 힘썼다. 다만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도중 한 1인 시위자가 '동성애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작은 소동도 일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네 번째 퀴어문화축제가 이날 열렸다.

/오원철 기자

제주항공 유족회, 식발·노숙농성 돌입

“참사 1년 되도록 진상규명 안돼” 대통령실 앞서 촛불문화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식발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항공 참사 1년이 되어 가도록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계획을 예고했다.

유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며 “사고초기 특별법 제정 등 빠르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 잊혀졌지만 진상규명이라는 알맹이가 빠진채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조사를 맡았던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1년동안 유가족들의 정

보공계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피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비행기 잔해 증거물 방치 등 불신만 쌓아오다가 중간보고회 형식의 공청회마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도, 국무총리실도, 대통령실도 ‘사조위의 독립성’만을 이야기하며,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사조위가 국토부에서 독립돼 제대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고조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1일 오후 12시 29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식발과 함께 공청회가 연기 될 때까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전민규 기자



전남교육청-전교조 전남지부, 정책협의체 체결

교권보호 내실화 비롯해 45개 의제 시행키로

전남교육청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저경력 교사 처우 개선, 현장 체험학습 업무 경감 등의 교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28일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5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업무도 경감시키는 등 45개 의제에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8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특히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보호 등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노·사간 정책협의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얻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도심 포트홀로 차량 파손 法 “광주시가 50% 배상”

도심 대로 포트홀(도로 패인)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 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21만9747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주문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2월 24일 광산구 왕복 10차선 대로를 주행하던 중 포트홀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다. /전민규 기자

민주노총, 결의대회...“광주시, GGM 관리감독·노조 탄압 대책 마련하라”

광주시, 입장문 통해 사기업 인사경영에 권한 없다고 밝혀

“GGM 일자리 늘리기 위해 정부·현대와 2교대 근무 협의”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시에 광주 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 탄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결의대회에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GGM 지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GGM노조 불인정 복지파탄·청년탈출 강기정 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 명이 모였다.

이번 결의대회 배경은 GGM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에 대한 대책을 최대 주주인 광주시에 마련하라는 것을 두고 시작했다.

노조는 “상생형 일자리 GGM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일하면서도 핸드폰 소지만

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멸절상여금도 없이 4년간 총살한 노예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매월 노동자 1명씩 징계를 주며 특근·잔업을 강제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하니 사측이 폭력을 행사했고, 멸절한 출입문을 스스로 교체하고 조합원 23명을 기물파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최대 주주로서 GGM의 관리감독과 노조 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 탄압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현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교대 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GGM의 신규 일자리를 최소 350명 이상 늘리기 위해 현재 정부·현대차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상생협정서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고 밝혔다.

이어 “GGM의 출범은 청년들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며 2교대 근무 추진 또한 일자리 상생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또 “사기업의 인사와 경영문제까지 권한 없는 광주시에 요구하면서 행정을 정치와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주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노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